

## 원자력, 국민의견 그리고 민주주의 - 한국과 프랑스의 원자력 관련 갈등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정효영

### 서론

프랑스는 전력생산의 8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 의존 국가이고 한국은 국토면적 대비 원자력발전소 수가 가장 많은 세계 제일의 원전 밀집 국가이다. 두 국가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중요도만큼 이와 관련된 갈등과 논쟁 또한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다. 즉 한편에는 원자력 사고의 위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침해,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을 주된 논거로 원자력 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른 한편에는 에너지 안보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그리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점을 내세우는 찬성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프랑스와 한국에서 원자력의 도입은 소수의 고위 정책결정권자들과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후 원자력 관련 정책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등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기 전까지는 소수에 불과했던 일부 반원자력 세력들의 거센 목소리를 뒤로 하고 공론화 없이 밀실에서 결정되었다. 이러한 비민주적 정책 결정 방식은 원자력 관련 문제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포함하므로 일반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었고 따라서 원자력 문제에 있어 反원전 세력이나 일반 국민의 의견은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지 못한 채 배제되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사회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 결정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문제는 엄연히 중요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즉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원자력 문제를 정책결정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명목으로 전문가들에게만 의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정책결정자들이 그리고 이들과 대립하는 세력들 또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견을 묻는 수단으로 쉽게 채택하는 방식이 여론조사이다. 즉 오늘날 여론조사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동시에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수단이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통해 측정된 수치화된 결과는 실제로 전체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의견을 올바르게 반영하는가? 즉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견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의견으로 간주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고 바람직한가? 여론조사가 국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국민의견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는 어떤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에 대한 사회갈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진정한 국민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본론

### 제1장 여론조사와 국민의견(Opinion publique)

여론 또는 국민의견(Opinion publique)은 사회그룹 안에 공유된 생각이나 판단의 총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16세기에 등장해 18세기 계몽주의의 도래와 함께 확산되었다. 계몽주의 시대의 여론은 식견을 갖춘 의견과 우매한 민중의 의견이라는 상반된 의미로 동시에 사용되었다. 이 두 가지 의미의 대립은 프랑스 혁명기를 거치면서 혁명가들에 의해 이상화된 여론, 즉 정치적 힘을 가진 그리고 발휘할 수 있는 국민의견과 판단 능력이 결여된 현실의 민중의견으로 변화되었지만 여론을 둘러싼 상반된 의미의 대립은 지속되었다. 즉 국민의견에 대한 정의의 대립은 결국 일반국민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인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는 그 주제와 양상을

달리하면서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민주주의 체제의 이상적 실현과 현실적 한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수세기를 걸쳐 지속된 여론 개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쟁을 종식시킨 것이 여론조사이다. 광고와 마케팅 시장에서 시작된 여론조사는 점차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특히 투표의사를 확인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 각광받게 된다. 특정 사회의 축소판으로 구성된 표본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계적으로 처리한 결과인 여론조사 결과는 과학성과 민주성을 갖춘 국민의견의 대표자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여론 또는 국민의견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수치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떠올리게 되었다. 즉 여론 또는 국민의견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렇다면 원자력을 주제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후쿠시마 사고(2011년 3월) 이후 프랑스와 한국에서 실시된 20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두 국가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1) 프랑스 국민의 최대 60%가 프랑스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는 반면 한국 국민의 거의 80%(77,8%)가 원전에 대해 우려한다.
- (2) 프랑스 국민의 원자력 전문가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으며(긍정 답변이 60%, 부정적 답변 2%에 불과), 70% 이상이 아주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발전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신뢰도 또한 80%가 넘는다.
- (3) 반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두 국가 모두에서 상당히 낮아 프랑스 국민의 13,4%만이 원자력 정책에 대해 진실을 말한다고 답했고, 한국 국민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30-40% 수준이고, 믿을 수 있는 원자력 관련 정보 제공자로 정부를 선택한 비율은 12,3%에 불과했다.
- (4) 두 국가 국민들 중 다수가 탈 원자력을 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다수의 조사가 이 주제로 실행됐는데 질문의 방식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 탈 원자력 찬성 비율을 37%에서 최대 80%까지로 볼 수 있다. 한국은 80%가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70% 가량은 현재의 원자력 비율을 유지하거나 높여야 한다는 답변을 내놔 국민 다수가 탈 원자력을 원하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 (5) 그러나 두 국가 국민 모두 미래에는 다른 에너지를 사용할길 희망하여 태양, 바람,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압도적 선호를 나타냈다.

여론조사가 드러내는 이 결과들을 국민의견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인가? 여론조사를 쉽게 이용하는 행태 이면에 여론조사가 국민의견으로서의 대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게 있어 왔다. 이들은 여론이나 국민의견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며 여론조사를 국민의견으로 간주하는 행태가 내포하는 위험을 지적해왔다.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여론 또는 국민의견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정보로 뒷받침 된 의견
- (2) 다른 이들과의 논의 및 협의를 거친 의견
- (3) (조작되거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의견
- (4) 조직화된 체계적인 의견

상기 4가지 기준에 비추어 여론조사의 국민의견으로서의 자격을 검토해 보면, 첫째, 여론조사는 해당 주제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숙고해 볼 기회를 가졌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참여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1)번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둘째, 참여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수집하는 과정이 어떤 협의나 논의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2)번 조건을 위배하며, 셋째, 참여자들은 정해진 질문에 대해 준비된 몇 개의 답변들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3)번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참여자는 개인의 자격으로 답변하며 해당 주제와 관련된 조직이나 단체의 의견은 배제된다는 점에서 (4)번 조건 또한 충족시키지 못한다.

## 제2장 듀이의 민주주의와 민중의견(Opinion du Public)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견을 확인할 수 없다면 참고하고 경청해야 할 국민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국민의견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치열했던 논쟁의 현장으로 돌아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각기 다르게 제시된 국민의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중 ‘특정 문제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민중(Public)으로 개념화 하고 ‘국민여론은 이 민중의 해당 문제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정의한 듀이(John Dewey)의 이론은 이 민중의 의견을 민주주의 국가 운영의 핵심 주체의 자리에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여타의 국민의견에 대한 이론과 구별된다.

듀이의 이론이 원자력에 관한 민주적 정책결정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갈등의 해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는 그가 국민의견을 전체 일반국민의 의견이 아니라 그가 독창적으로 개념화한 민중, 즉 특정 사회 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정의한 데 기인한다. 일반국민이 심사숙고해 볼 기회를 가지지 못한 모든 정치적 문제에 대해 합리적 정치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못하겠지만 자신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받고 논의할 기회를 거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의견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민중의 의견(Opinion du Public)은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도 절대적 우위를 점할 것이므로 이에 기반을 둔 정책결정은 해당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자력 문제에 있어 민중은 누구인가? 듀이의 민중 개념에 따라 원자력 민중을 정의하면, 이들은 원자력의 이용으로 인해 간접적 영향을 받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형성하고자 노력하며 이 의견 즉 정치적 판단을 전 대중과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원자력 민중이 기존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정부나 관련 분야 종사자 심지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와는 구별되는 집단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i)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단체 중 (ii) 원자력 문제 해결을 그 설립 목적 중 하나로 명시하고 (iii) 대안 제시를 위해 활동하며, (iv) 정부나 기업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는 단체를 원자력 민중(Publics radioactivés)' 으로 선정하고 이들을 통해 원자력 민중의 의견을 알아보기로 한다. 원자력 민중의 원자력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다음과 같다.

- (1) 원자력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기술이다. 사고의 위험이나 테러리스트의 공격, 방사성폐기물 등에 대해 완벽한 대비는 불가능하다.
- (2)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원자력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심지어 무능력하며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없다.
- (3) 원자력은 위험하고 인간과 환경에 해로우며, 관련 설비를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집단은 신뢰할 수 없고 무능력하므로 원자력 이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 (4) 원자력은 기술 개발과 해체 및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저렴한 전력원이 아니며, 기후변화의 주된 요인은 에너지 소비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워 원자력을 옹호하는 것은 비약이며, 관련 정책이 공론화 없이 밀실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에너지이며, 정작 개발에 주력해야 할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저해한다.
- (5) 따라서 원자력은 미래 에너지가 아니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가능한 빠른 시일에 전부 대체되어야 한다.

여론조사에 의해 드러나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견과 원자력 민중으로 선정된 단체들이 표출하는 민중의 의견을 비교해 보면, 후자의 경우 원자력에 대해 더 강한 반대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논거도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 민중은 원자력에 대해 여론조사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큰 우려, 관련 전문가와 당국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효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인다.

이러한 두 의견 간의 차이는 여론조사의 구성과 실행 과정에 기인한다.

여론조사는 원자력에 대한 의견을 형성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구구성 비율에 따라 표본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에는 아직 원자력에 대한 찬반 여부가 분명치 않은 국민들이 주어진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즉흥적으로 마련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원자력에 대해 심사숙고 해 보고 찬반 의견을 형성한 국민들은 원자력에 대해 더 강하게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진스버그(Bensamin Ginsberg)는 여론조사가 반대하는 국민의견을 완화시켜 드러내는 이와 같은 현상을 집단적 승인 표명 (collective statement of permission)이라고 표현하며 정치적 영역에서 여론조사의 활용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한다. 파트릭 샹판뉴 (Patrick Champagne)도 정치가들이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명목으로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행태를 고발하며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는 물신 (Fétiche)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비판들은 결국 정책 결정을 위해 국민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의 행태를 답습하여 여론조사를 의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고 시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제3장 진정한 국민의견과 정책결정

여론조사가 민주성을 담보한 국민 의견 측정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특정 사회의 축소판(Miniature)처럼 구성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행 되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지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한 국민이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축소된 사회인 표본에 선정된 국민들이 한명씩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갖는 것은 일견 민주적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선거와 달리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어떤 문제에 대해 숙고하고 연구하며 다른 이들과 논의한 후 분명한 의견과 신념을 형성한 사람의 의견과 자신과는 관련 없는 문제로 간주하고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의 의견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취급

하는 게 민주적인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론조사에 결합된 민주적 이미지는 민중의 의견을 일부 소수의 극단적인 의견으로 보이게 한다. 따라서 민중의 의견이 오늘날 여론조사가 행사하는 국민의견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지 않은 개인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 다수의 의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감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논거로 뒷받침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설득력 있는 의견으로 발전해야 한다. 과학적 논거를 갖추려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즉 민중의견의 국민의견으로의 성장은 민중과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고도의 기술적 쟁점을 포함하는 원자력 문제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원자력 민중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된 바는 없다. 다만 원자력 민중의 의견 확인을 위해 선정한 원자력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들(프랑스 6개 한국 4개)의 최근 연간 활동 보고서 및 재정보고서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지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기부금액도 상당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원자력 민중의 의견이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듀이의 민주주의 사상에 의하면 국가는 민중과 한 사회의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민중의 대리인인 정부의 결합체이다. 따라서 민주적 국가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과 그들의 대리인인 정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그 틀이 정해진다. 듀이에 따르면 국가보다 앞서 민중이 존재한다. 따라서 듀이의 관점에서 원자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일은 그들에게 공적 문제를 위임한 민중에게 그 의견, 정치적 판단을 구하는 일이다.

여기서 잠시 여론조사에 대한 논의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여론 조사는 원자력 문제에 대해 의견을 형성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응답자를 선발한다. 여론조사 결과가 드러내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견이 민중의 의견 보다 다소 완화된 반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응답자 중 아직 의견을 형성하지 못한 국민들, 즉 아직 원자력 민중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포함되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만일 원자력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 원자력 민중의 의견과 상당히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피슈킨(James S. Fishkin)이 제안한 ‘숙의적 여론조사(sondage délibératif)’는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 “시민성이 토론 없는 투표권 행사로 제한된다면 이 투표 자체가 의미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슈킨은 “민주주의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자격 있는 유일한 의견은 사전에 정보를 받고 구성원들 간에 논거를 교환한 후의 의견”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여론조사 실시를 전후해 참여자들이 관련 주제에 대해 학습하고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갖도록 조직한 숙의적 여론조사를 고안한다.

피슈킨의 숙의적 여론조사는 그 응답자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정보를 습득하고 의식을 갖춘 후 학습하고 소통할 기회를 부여받고 질문에 답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조사된 결과는 듀이가 주장하는 민중의 의견과 상당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과 비교해 볼 경우, 적어도 첫 번째 조건(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정보로 뒷받침 된 의견)과 두 번째 조건(다른 이들과의 논의 및 협의를 거친 의견)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국민의견에 보다 가까운 의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탈 원자력 정책 발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해소 방안으로 건설 중이던 두 기의 원자력 발전소(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 사례는 의미심장하다. 첫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일반 시민대표단을 구성할 때 그들에게 참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다. 시민참여단은 기본적으로 자발성에 근거하여 조직되었다. 둘째, 시민참여단은 원자력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해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제공 받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을 달았다. 즉 시민참여단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보를 갖추며 의견을 형성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셋째, 이들은 여러 차례 찬반의 대립된 의견을 가진 단체들과의 토론

및 논쟁에 참여했다. 따라서 그들의 의견은 논의 및 협의를 거친 의견이다. 넷째,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대통령이 애초 약속한 바와 같이 단순한 참고의견이 아닌 결정권을 부여받은 의견이었고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 시민참여단의 의견에 따라 건설을 재개했다.

여론조사의 국민의견으로서의 자격을 부인하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국민의견의 조건 그리고 듀이의 민주국가에서 민중의견의 역할에 비추어 평가하면, 정부 스스로 원자력 민중을 형성하고 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된 의견에 대해 침묵하게 찬반의 목소리를 높였던 여타의 단체들이 이 의견을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삼간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민의견이 사회갈등의 해소에 작용할 수 있는 힘을 증명한다.

## 결론

국민의견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공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 즉 정치적 판단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불신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통치권을 소수 엘리트에게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또한 그 기저에 국민의 통치자로서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다.

민주주의를 ‘삶의 방식(une façon de vivre)’ 이라고 정의하는 듀이의 이론은 이와 같은 국민의 능력을 둘러싼 논쟁에 새로운 지평을 제공한다. 국민이 모든 공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제시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정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다른 이들과 소통함으로써 의견을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각각의 사회 문제를 둘러싸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민중이 탄생하여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들이 구축하는 집단적 지성만큼 그 문제의 해결에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듀이의 민주주의와 국민의견에 대한 이론은 가장 이상적인 동시에 충분히 실현가능한 모델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중의견에 의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가장 민주적

이고 근본적인 사회갈등 해소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의 확대는 의미 있는 민주주의의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Blondiaux Loïc, *La Fabrique de l'opinion. Une histoire sociale des sondages*, Paris, Seuil, 1998, 601p.

Callon Michel, Lascoumes Pierre et Barthe Yannick, *Agir dans un monde incertain. Essai sur la démocratie technique*, Paris, Seuil, 2001, 358p.

Champagne Patrick, *Faire l'opinion. Le nouveau jeu politique*, Paris, Minuit, 1990, 322p.

Dewey John, *Le public et ses problèmes*, Paris, Gallimard, 2010, 336p.

Padioleau Jean-Gustave, *Arts Pratiques de l'Action Publique Ultra-Moderne*, Paris, L'Harmattan, 2003, 193p.

Trinh Sylvaine et Wieviorka Michel, *Le modèle EDF. Essai de sociologie des organisations*, Paris, Découverte, 1989, 266p.

Touraine Alain, Hegedus Zsuzsa, Dubet François et Michel Wieviorka, *La prophétie anti-nucléaire*, Paris, Seuil, 1980, 373p.

Zask Joëlle, *L'opinion publique et son double*, vol.1, Paris, L'Harmattan, 1999, 204p.

Inchauspé François-Xavier, *Reconstruire de la légitimité démocratique. L'articulation entre public, communauté et demos dans la pensée de John Dewey*, thèse dirigée par Jean-François Kervégan et Josiane Boulad-Ayoub, Université du Québec à Montréal et Université Paris-I Panthéon-Sorbonne, 2012, 394p.

Barthe Yannick, Callon Michel et Lascoumes Pierre, « De la décision politique réversible : histoire d'une contribution inattendue de l'industrie nucléaire (française) à l'instauration de la démocratie dialogue », *Revista Brasileira de Castão Urbana*, vol.2, n°1, 2010, pp.57-70.

Bryce James, « Le gouvernement par l'opinion », Extrait de *La République américaine*, Paris, V. Girard et E. Brière, Edition française, 1901, vol.3, pp.340-349, *Hermès*, n°31, 2001, pp.159-166.

Blondiaux Loïc, « Ce que les sondages font à l'opinion publique », *Politix*, vol.10, n°37, 1997, pp.117-136.

Bourdieu Pierre, « L'opinion publique n'existe pas », *Les temps modernes*, n°318, 1973 pp.1292-1309, *Acrimed, Action Critique Médias*, 2012, pp.1-7.

Champagne Patrick, « Le sondage et la décision politique », *Revue Projet*, n° 268, 2001, pp.65-73.

Fishkin James S., « Vers une démocratie délibérative : l'expérimentation d'un idéal », Extrait de *Citizen Competence and Democratic Institution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9, chapitre 12, p.279-290, Traduit de l'anglais par Dominique Reynié, *Hermès*, n°31, 2001, pp.207-222.

Gallup George, « Sondages d'opinion et démocratie », Extrait de *Public Opinion in a Democracy*, Stafford Little Lectures, Université de Princeton, 1939. Traduit de l'anglais par Dominique Reynié, *Hermès*, n°31, 2001, pp.197-180.

Gaxie Daniel, « Au-delà des apparences... [Sur quelques problèmes de mesure des opinions] », dans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 sociales*, vol.81-82, 1990, *L'économie de la maison*, pp.97-112.

Ginsberg Benjamin, « Les sondages et la transformation de l'opinion publique », Extrait de *The Captive Public : How mass Opinion Promotes State Power*, New York, Basic Books, 1986, *Hermès*, n°31, 2001, pp.181-206.

Topçu Sezin, « Nucléaire : de l'engagement savant aux contre-expertises associatives », *Natures Sciences Sociétés*, vol.14, n°3, 2006, pp.249-256.

Zaller John, « Repense l'opinion », Extrait de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91-96, Traduit de l'anglais par Loïc Blondiaux, *Hermès*, n°31, 2001, pp.223-232.

Zask Joëlle, « Pourquoi un public en démocratie? Dewey versus Lippmann », *Hermès*, n°31, 2001, pp.63-66.

Zask Joëlle, « Le public chez Dewey : une union sociale plurielle », *Tracé. Revue de Sciences humaines*, n°15, 2008, pp.169-189.

조경영, 문주현,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조사, 동국대학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9, 2011, pp.181-189.

진상현, 원자력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 격차 분석, 경북대학교,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8, n°4, 2014, pp.149-173.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 국민인식 조사 결과, 2013-2016.

환경운동연합, 2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 증설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2013. 28p.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2017, 188p.

고경민, 이성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이용과 여론 : 주요국 사례 검토와 정책적 함의, 2013, pp.5-35.

이근대, 원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126 p.

이정윤, 한국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은 충분치 않다, 한겨레, 2015.3.11.

양이원영, 한국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지 않다, 한겨레, 2015.3.10.